

1 누를수록 뛰는 강남 집값 2 금리 올라도 주식보다 채권

경제 상식과 거꾸로가는 경제

은행·보험사 600곳 문닫고 임직원 6000명 짐 싸다

지난 1년간 은행·보험 점포 600여곳이 간판을 내리고, 6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해직을 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2금융권의 점포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1만8431개, 종사자는 36만66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 점포가 7077개, 보험 점포가 6533개다. 임직원 수는 은행이 11만4295명, 보험이 5만8261명이다. 두 업권의 점포 수(1만3610개)는 전체의 73.8%, 직원 수(17만2556명)는 전체의 47.1%를 차지할 정도로 금융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권은 점포와 직원을 빠르게 감축하고 있다.

은행 점포는 1년 만에 279개(3.8%) 폐쇄돼 머지않아 7000개를 밑돌 전망이다.

보험사 점포는 344개(5.0%) 줄었다. 생명보험사가 281개(7.3%), 손해보험사가 63개(2.1%) 문을 닫았다.

은행과 보험을 합쳐 623개의 점포가 사라진 만큼, 인력 재배치와 명예퇴직 등으로 고용 규모도 감소했다.

은행은 11만8633명에서 4338명(3.7%)이, 보험사는 5만9475명에서 1214명(2.0%)이 줄었다. 1년새 은행보험 회사 직원 5552명이 짐을 싣 셈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쿠팡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공정위, 납품대금 지연 여부 등 살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은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쿠팡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납품 대금 지연 여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물류센터 입고와 납품 대금 지연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근 쿠팡 로켓배송 상품 물류센터 입고와 납품 대금 지연 임금 문제가 제기됐다. 쿠팡이 자사 내 문제로 상품 입고를 늦췄으면서 납품대금 정산을 미루거나, 미입고된 상품을 오랜 시간 외부에 방치하면서 분실 사태도 이어졌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한줄뉴스

▲ 지난 달 수출액이 설 연휴 등 조업일수 감소에도 소폭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2016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SK매직은 빌트인 가스레인지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탑재한 '빌트인 IoT 쿡탑 가스레인지' (사진)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 LS산전이 태양광을 비롯해 ESS, DC(직류)/AC(교류) 전력 솔루션 등 신재생 발전시스템 토털 솔루션을 앞세워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

▲ 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융위 등록제를 전면 시행하고 무등록 영업 업체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최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이 또 한 번 지갑을 털고 있다. 공기청정기는 물론 마스크, 공기정화식물 등 관련 제품 수요가 크게 늘었다.

부동산 '규제의 역설' 뚜렷
강력한 투기 수요가 원인

美 금리인상 대비 채권투자
수익 낮아도 안전자산 베팅

부동산 '강남 불패'. 천정을 뚫었다고 해도 빈 말이 아닐 정도로 자고 나면 억 단위로 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것이 '공급 부족'이다. 문재인 정부도 공급 확대정책을 쓰고 있다. 공급의 균형을 맞춰 집값을 잡겠다는 것. 하지만 정책과 현실이 따로가면서 이 같은 정책에 물음표가 붙는 게 현실이다.

이유가 있다. 투기적 부동산 시장에선 수요가 늘어도 공급은 오히려 준다. 학습효과가 이를 잘 말해 준다. 강남 인근에는 강남을 대체할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가 많다. 분당·판교·위례 등이다. 하지만 '천당 위 분당, 분당 위 판교'라는 말처럼 판교신도시 건설은 시장 참여자들의 투기 심리만 자극했다.

부동산시장에는 '규제의 역설(paradox)'이 뚜렷하다.

1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 2월 4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14%, 0.02% 상승해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송파는 주공5단지 가격이 떨어졌으나 잠실동이나 신천동, 방이동 등 대단지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뤘었다. 신천동 진주, 잠실동 잠실엘스,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문정동 올림픽힐빌리타운 등이 500만~1억원 정도 올랐다. 종로는 3500만~5000만원 올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약 3년7개월 만에 하락전환했다. 반면 매매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다. 서울은 0.22%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다. 성동구는 옥수하이츠와 옥수삼성, 응봉동 대림1차, 금호2기동 금호자이 2차 등이 500만~1억원 정도 올랐다.

"가격주문에 사겠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동안 새 아파트여서 매물은 없고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요즘 들어 분위기가 주춤하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B중개업소)

이 같은 규제의 역설 원인은 투기 수요에서 찾는 전문가들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 개인이 아파트를 여러 채 사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투기 수요의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은 강력한 수요와 기록적 저금리를 반영해 여전히 상당한 급등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0%를 웃돌아 집값 조정과 급격한 금리 상승시 취약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글로벌 증권시장에서 미국 금리의 '역설'도 보인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이 떨어져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가 낫다. 하지만 연초 자금 흐름은 이 같은 정설과

는 사뭇 다르다. 올해 세너 차례가량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 전망에도 투자자들의 뭉치듯은 해외채권형에 몰리고 있다.

이 같은 미국 금리의 역설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기대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채권 투자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해외채권형 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1조244억원이다. 전체 해외펀드순자산은 51조3939억원이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우려에도 외국인인 한국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지난 1월 한달 동안에 상장채권 4조6150억원 규모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만기상환(2조3000억 원)을 제외한 순투자액은 2조322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에도 한국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는 것은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이 탄탄한데다 '분산 투자나 재정거래' 차원에서 매력이 커서란 분석이다.

금리의 역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

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1450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조4000억 원(8.1%) 증가했다. 연간 부채 증가율은 3년 만에 한 자리수로 떨어졌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전히 소득에 비해 가계 빚 증가세가 가팔라 취약계층이 부실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 가격(4월 물)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온스(31.1035g)당 1,317.90달러(2월 28일 기준)를 기록했다. 최근 달러 강세에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말 1240 달러와 비교하면 금값이다. 금 가격 상승은 미국 국제 달러와 관련이 깊다. 금값은 미국 달러로 표시된다. 이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면 다른 통화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금을 사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다.

하나금융투자 김훈길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금리와 금은 역상관성을 보유했다"면서 "그러나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2000년대 중반 '골디락스' 장세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역시 낮은 물가와 높은 경제성장의 골디락스 국면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민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근로시간 단축... 中소, '임금 감소'·'생산성 향상' 과제

한경연 보고서

현재도 인력 부족·생산 차질
유지 위해선 8.6조 추가부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며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 감소와 생산성 향상이란 두 과제를 떠안게 됐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초과근로 시간이 많은 30~29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당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면 임금이 지금보다 각 0.4%, 0.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1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 추가 비용 가운데 70%인 약 8조6000억원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잔업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데 근로시간을 단축해 급여가 줄어들게 됐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인력정책 실장은 "영세기업의 경우 현재도 인력이 부족해 생산량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 납기 차질이 이어지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 심화와 비용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까지 아직 2년 가까이 남은 만큼 정부나 기업, 근로자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손질 나선다

고용부, 제도 개편 TF 발족

정부가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됐던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TF 위원은 고용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

히 낮은 자, 혹은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사실상, 장애인은 최저임금 제도 밖에 위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법 조항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독소조항'인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 폐지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TF 활동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